

“인구 1천400만인데... 교통인프라 태부족”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 GTX·5호선 김포연장 등 논의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최근 1400만명을 넘었음에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1일 수원시 정조로 국민회의 경기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민은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GTX를 비롯한 도내 교통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위원장은 “경기도는 반도체·IT·제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팽택·동탄·용인·이천 등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윤 정부 이후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경기도는 3040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맞벌이도 많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가 많다. 초등 돌봄의 경우 대기수요 65%가 경기도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교육·보육 지원도 중앙당에 부탁했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경기도 농촌에 소멸 징후 현상을 짚고, 식량 안보와 지방 활성화를 위한 농촌 농업 대책이 절

실함도 피력했다.

유 위원장과 함께 홍철호 김포시을당협위원장과 김필여 안양시 동안을당협위원장도 경기도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홍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김포시장이 우리 당이 맡으면서 정부 정책으로 5호선 김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벽은 신도시 추가 개발로 넘어왔다. 의미이고 이제 절차에 불과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조사를 보면 예타가 1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또 예타 얘기를 한다면 4년 정도 걸려 착공된다”며 전면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이어 홍 위원장은 김포 지하철의 무인 운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를 지적하고, 5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필여 당협위원장은 그간 정부에 촉구한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제안했다.

앞서 모두발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협위원장님들·의원님들”이라며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도 열심히 앞장서겠지만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이들의 발언을 칭찬했다.

홍정윤 기자



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박성호 부천시의회 의원 사퇴 촉구 집회. (사진=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박성호 부천시의회원 결국 시의원직 사퇴

성 비위 사건 논란 열흘만 제268회 정례회 표결 처리

동료의원 성 비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호 의원이 1일 9시께 전격 사퇴서를 제출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사직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박 의원은 성 비위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 권고가 있는 지 10여 일만인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사퇴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명 중 박 의원을 제외한 26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과반인 24명이 박 의원 사퇴에 찬성했다. 나머지 2표는 무효표로 집계됐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에 공감한다”며 “시민과 피해를 본 동료 의원, 사무국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수습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부천 시의원들과 부천시을 지역구 당원들은 오전 9시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전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부천시의회 안효식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강제 성추행 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성 비위 박성호 의원 사퇴에 찬성했다. 나머지 2표는 무효표로 집계됐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성열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 목소리 키워

민주당 경기도당 서명운동 임종성 “오염수는 핵폐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수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 발대식에는 정청래(서울마포구), 고민정(서울광진구), 서영교(서울중랑구) 최고위원과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당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매일 굴중의교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반대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맨 처음 연단에 오른 임종성(광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과장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전 오염수를 식수라며 헛소리로 우기는 당신들의 말이 바로 괴담이고, 당신들이 바로 괴담 유포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법 밖 행동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해야 할 것은 양곡관리법도 아니고 간호법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수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당 경기도당)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아닌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대통령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도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생명권을 내놓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

리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면 너나마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은 나와 내 아이들, 내 가족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서늘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

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자진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내 앞에 원전 오염수가 있으면 1리터도 10리터도 마신다 했다 지 않냐”면서 “그렇게 깨끗하면 패트병에 넣어 배달해 먹으면 된다. 왜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느냐.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려고 하느냐”고 규탄했다.

김민창 기자

전세사기피해 범시민적 대응 촉구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사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전세 사기 후속 대책’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호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지난 본회의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른 시일 안에 역전세·강동전세 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전국에 모범이 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시민사회에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나가며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이후부터 끊임없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제287회 임시회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국에 모범이 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나가며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이후부터 끊임없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제287회 임시회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국에 모범이 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시민사회에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나가며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이후부터 끊임없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제287회 임시회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국에 모범이 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시민사회에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나가며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성남시의회 ‘반쪽자리’ 정례회

민주당 정례회 등원 거부 여야 갈등에 파행 장기화

국민의힘과 박광순 시의회 의장 의회 폭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성남시의회는 15일간 일정에 험난한 미래가 예고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박광순 시의회 의장 의회 폭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회기 동안 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 릴레이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여·야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나머지 민주당 위원 14명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반쪽짜리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정연무 기자

“산단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

김성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의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

방안’과 숙명여자대학교 임용훈 교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업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및 폐자원에너지화’라는 주제발표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산업단지의 대동맥과 같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역할을 한다면 국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간담회

이재정 의원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사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회와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개회식에서 이재정 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있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은 물론 민생주체와 전문가·부처 관계자가 모여 오염수

방류 시도로 예상되는 피해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간담회 첫 순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생계와 직결된 민생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가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표 기자

야생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이학영(민주당, 군포시·사진) 의원이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협정이 국내 발효되기 이전,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된 곰의 경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이용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농가·전문가·시민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국내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사육 곰 탈출 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았다. 웅담의 인기가 식으며 관리가 어려워진 노후 사육 시설도 잦은 탈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민간이 합의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얻어 2026년 사육 곰 보호시설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곰 사육’이 완전히 종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야생생물의 보호는 인류가 생존해야 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정용표 기자